

지방교부세 20년간 지원 등 파격 재정 특례 요구에 방점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미리 보니

광주시와 전남도가 마련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에는 중장정부로부터 막대한 재정 권한과 세제 혜택을 이양받는 이른바 재정 차자권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 단순 예산 지원을 넘어 지역 내에서 걷히는 국세를 직접 운용하고, 대규모 개발 사업의 발목을 잡던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장기간 면제받는 조건도 포함됐다.

14일 광주일보가 입수한 특별법안을 분석한 결과,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통합 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재정 보전 대책이다.

법안은 광주시 법안과 전남도 법안이 함께 담겼으며 이견이 있는 경우 조율할 수 있는 여지를 뒀다.

법안 제43조의 경우 광주시는 국가는 보통교부 세와 별도로 특별시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에 폐지되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12를 20년간 매년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통합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행·재정적 공백을 메우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

이는 대구·경북이나 대전·충남 등 타 지자체가 논의 중인 특례 기간(10년), 지원비율의 두 배에 달한다.

전남도는 별도안(제44조·제45조)을 보통교부 세와는 별도로 '통합특별교부세지원금'과 '통합특별교육교부세지원금' 신설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5를 통합특별교부세로, 1000분의 3을 교육교부세로 지원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전남도의 안대로라면 광주전남특별시는 대한민국 전체 내국세의 0.8%를 고정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이는 국가 경제 규모 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더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재정 파이가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조성에서도 전남도는 국가의 책임을 더 강하게 요구했다. 전남도는 특별시 내 시·군·구 균형발전을 위해 설치하는 '균형발전기금'에 국가는 1조원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이 차지 광주 중심의 빨대 효과를 기록화할 수 있다는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가 차원의 확실한 '당근'을 요구한 셈이다.

통합 도시의 명칭과 청사 소재지를 다른 제6조에서는 광주시, 전남도의 입장이 미묘하게 달랐다. 광주시안은 특별시의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로 하고 청사는 종전의 시청과 도청을 활용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전남도는 단서 조항을 통해 "특별시 명칭은 지방자치법 절차에 따라 특별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통합 출범 이후라도 여론 수렴을 통해 명칭을 바꿀 수

단순 예산 지원을 넘어

지역에서 걷히는 국세 직접 운용
대규모 개발 사업 발목 잡던 예타
장기간 면제받는 조건도 포함
오늘 국회 공청회 통해 공개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명칭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의 불씨를 남기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세의 지방 이양에 대해서는 시·도가 의견을 같이했다.

법안 제42조에 따르면 국가는 특별시 관할구역 내에서 징수하는 법인세 총액의 100분의 70을 특별시로 교부해야 한다.

또한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 제외)의 일부도 특별시에 귀속시켜 자주 재원을 대폭 확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광주전남특별시 계정'을 설치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비용과 국가보조 사업 수행 등에 투입된다.

행정통합과 관련된 대규모 사업의 경우 기획에 산적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시행 이후 10년간 예비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담겼다.

이는 AI, 에너지 등 급변하는 미래 산업 트렌드에 맞춰 적기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 조치로 해석된다.

산업 분야에서는 '에너지·AI·문화 수도'라는 비전에 걸맞은 권한 이양이 명시됐다.

특히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가진 권한을 대거 가져온다.

국가 AI 혁신거점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특별시 전 지역과 연계된 교통·물류·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하며, 특별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로 지정해 건축 기준과 용도 지역 규제를 완화할 수 있게 했다.

법안 제286조는 종전의 전남도 관할구역에 국립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동부와 서부에 각각 부속 병원을 설치해 의료 취약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명시했다.

통합 도시의 대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도 포함됐다. 특별시 설치 후 10년 동안 통합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2026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이번 특별법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공청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4일 일본 나라현 대표 문화유적지인 호류지(법륭사)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제공〉

"재일동포, 계엄때 민주주의 함께 지켜 존경과 감사"

이재명 대통령 동포들과 간담회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현지 동포들과 간담회를 갖고 "(재일동포들이) 불법계엄 사태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

한 수많은 불빛을 밝히는 데 함께했다"며 "노고와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이 언급한 뒤 "모국에 대한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이 가슴을 뚫을하게 만든다"

며 했다.

이율리 "나라현의 아스카무라에 가면 사신도가 그려진 무덤이 있고, '도래인'이라 불리는 우리 선대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고 들었다"며 "한일 간 불행한 과거 때문에 이처럼 수천 년에 이르는 아름다운 교류의 역사가 제대로 기억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발의 '숨 고르기' … '16일→월 말' 연기

출속 추진보다 내실 다지기

기대 수준보다 후퇴 우려도

광주시와 전남도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발의 시점이 당초 예정된 16일에서 이달 말로 조정됐다.

지역 여론과 국회 차원의 입법안을 하나로 모으고 정부의 확실한 행·재정적 지원을 담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특별법 안의 내용이 지역사회에 기대했던 수준보다 후퇴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4일 양부남·여수·광주·전남 통합추진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를 마친 뒤 "16일까지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속도 조절을 공식화했다.

양 위원장은 "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입법추진

단 회의 내용과 지자체가 마련한 안, 그리고 정부 층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출속으로 추진하기보다 내실을 기하기 위해 이달 말쯤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는 15일 공청회를 거쳐 16일 발의하겠다는 당초 로드맵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하지만 2월 내 특별법 제정에는 무리가 없다는 것이 양 시·도와 정치권의 예상이다.

양 위원장과 시도 관계자 모두 "발의 시점만 늦춰질 뿐 상임위 심사와 2월 말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최종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일정 조정은 정부와의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통합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와 특례 조항을 법안에 최대한 담아냈지만, 정부 부처와의 실무 조율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후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가 마련한 통합 법안은 행정·재정적 인센티브와 각종 권한 이양 등 지역의 요구사항을 최대치로 담은 소위 '희망안'에 가깝다.

그러나 정부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국가 사무 체계 등을 이유로 별도의 기준안(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요구가 정부 가이드라인에

막혀 상당 부분 걸려질 공산이 크다.

국회 발의 이후도 문제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시도의 안을 바탕으로 법안을 대표 발의하더라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2차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 정부가 난색을 표하거나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을 경우, 핵심 특례 조항들이 가지치기 당할 위험이 크다.

광주시 관계자는 "우리가 바라는 내용을 100퍼센트 관철하기는 어렵더라도 지역 발전에 필수적인 핵심 조항들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며 "정부 논리에 대응해 얻어낼 것은 확실히 쟁기기 위해 발의 전까지 치열한 물밑 작업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5일 열리는 입법공청회를 통해 지역 여론을 환기하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명분 쌓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양 위원장은 "시도는 바라는 사항을 최대한 넣었지만, 정부는 나름의 논리를 대응할 것이기에 (법안 내용의) 후퇴는 가능성은 있다"며 "지킬 것은 반드시 지켜내기 위해 지역 의원들이 힘을 합쳐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일보 74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광주문화신협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